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1995. 12.

申 相 振 (국제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鄧小平은 91세의 고령으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 봄 이래 鄧小平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江澤民, 李鵬, 喬石 등 중국의 현 지도부는 鄧小平 사후 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鄧小平은 1978년 이래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좌우해 온 최고 지도자라는 점에서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국내정세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해 온 이유를 鄧小平과 북한 원로세대 지도자 사이의 유대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바, 鄧小平 사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鄧小平 사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의 안보 및 통일정책 입안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국 제 연 구 실

要 約

鄧小平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국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鄧小平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를 분석·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 中國의 國內情勢 展望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정국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당 지배체제가 단기간내에 큰 도전을 받지 않을 것이며,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지방에 대한 당중앙의 통제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서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는 상당 기간동안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첫째,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江澤民은 1989년 당중앙군사위 주석에 임명된 이래 3大 總部 및 7대 軍區 등 주요 지휘관을 자과 인사로 교체함으로써 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江澤民은 중국 지도부가 鄧小平 사후의 권력투쟁은 공

산당 지배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지도부 전체에 공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지도부간 단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차 당대회이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도입 등 개혁·개방 정책 진전에 따라 중국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는 바, 이는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유지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정면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집단화된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사회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공산당은 모든 국가기구, 군대, 공안부대 및 언론매체 등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 지배체제는 경제발전에 따라 조직력에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지만 鄧小平 사후에도 상당기간 큰 무리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鄧小平의 사망이 중국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주로 재정·조세·무역 등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며, 1993년 14기 3중전회 이래 「分稅制」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에 이양되었던 재정권한을 회수하고, 1994년 14기 4중전회에서 확정된 「民主集中制」 강화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鄧小平 사후 소수민족문제도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西藏과 新疆

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이민정책과 교화정책을 실시하여 漢族으로 동화시켜 왔으며, 西藏과 新疆 自治區내 소수 민족 사이에서 분파가 존재하고 있고, 과격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종족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내 독립 지지자들은 급진적 분리독립 주장이 중국에게 대만 침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립 주장을 가능한한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와 관련, 鄧小平 사후 중국은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 인플레이, 부패 등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해야만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급진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절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제개혁의 속도와 폭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많다.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은 무엇보다도 대내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당원과 정부 관리의 부패에 대한 정풍 강화, 연해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와 내륙지역 개발 지원 확대 등 안정 기조의 긴축경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안정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원될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는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 및 비국유부문의 성장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일정기간 동안의 정치·사회적 과도기를 지나 중국은 개혁·개방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하는 등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결국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개혁문제와 농촌경제 침체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2000년까지 중국경제는 대체로 연 10% 내외의 성장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축기조의 경제정책 결과 1994년 21.7%에 달하였던 인플레이션도 다소 둔화되는 등 鄧小平 사후 중국경제는 안정기조하에 계속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문제와 관련,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 군부의 정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江澤民, 李鵬, 喬石 등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과거 毛澤東 이나 鄧小平 등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江澤民을 위시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毛澤東과 鄧小平과는 달리 혁명전쟁을 겪지 않은 실무형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지도부가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필요성은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를 불가피하게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鄧사후 중국 지도부가 대내 단결을 기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수용하도록 할 것이다.

과거 중국 군부의 정치행태를 감안해 볼 때, 중국 군부의 정치

참여 확대는 대내정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 군부는 어느 집단 보다는 중앙정부가 취약하거나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강력하고 단합된 상태로 유지되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군부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는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군부는 대만문제와 대미관계 등 대외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며, 중국 지도부는 군부의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鄧小平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군부는 외교부가 대외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약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19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이 연장된 직후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이 李登輝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용한 후 미국과 대만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2. 中國의 對外政策 展望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내외 안정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1989년 天安門 사건이후 개최된 13기 5중전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사임 이후 鄧小平은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

지 않지만, 鄧小平의 생존은 중국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대외문제가 중국의 안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유지하는데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西藏과 新疆의 소수민족 自治區와 접경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문제와 대외 경제문제 등 주권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유연한 정책자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鄧小平 사망이후 중국에서 毛澤東 사망 당시와 같은 대폭적인 대외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鄧小平 사후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이 지도자 일개인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7인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책변화의 폭이 클 수 있을 것이나, 7인의 정치 지도자간 합의 도출을 통해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책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이 다원적인 형태를 띠며, 지도자들이 기존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다만 鄧小平 사후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군부 등 보수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 정책자세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만문제와 南沙群島 문제 등 주권문제와 미, 일 등 강대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鄧小平 사후 지도부 간 권력투쟁 등 대내 불안정 국면이 조성되게 될 경우에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 시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서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록 지도부가 좌경적 성향을 보여 왔으며, 대외적으로도 반외세적 태도를 보여 왔다.

대미정책과 관련, 중국은 미국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협력정책을 전개할 것이나, 대만문제 등 중국의 주권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는 강경정책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는 대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서방국가들과 경제협력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내부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역외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집단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적 필요성은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1997년 중국이 홍콩 주권을 회복한 후 대만에서 독립주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군부의 정치 영향력 증대로 중국에서 南沙群島 등 영유권문제에 대해 강경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처하지 않고서는 아시아에서 영향력 유지·확대라는 자신의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협력정책을 추구할 것이나, 정치·군사적으로는 견제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대일 경제교류·협력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더욱 경계하도록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따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경제적 부의 축적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의 중국지도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체 이데올로기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대내 단결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고취는 결국 일본 등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경직된 방향

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鄧小平 사후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 견제정책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대러정책과 관련,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선린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대미·일 견제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선린관계 증진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대중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내 회교도가 新疆과 西藏지역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최고 실권자인 鄧小平 사망이후에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내 안정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인 바,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서 미, 일, 중, 러 4강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야기될 경우 중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 일,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군사적 충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가 동요되고 남북한간 세력균형이 파괴될 경우에도 북한 난민이 중국 국경을 월경할 수 있는 등 중국의 대내 안정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중국은 무엇 보다도 대내 안정유지를 우선시하게 될 것인 바, 한반도문제가 자신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지원정책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는 판단에 입각,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대외 영향력 증대를 대내 단결도모 수단인 하나로써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관련, 鄧小平 사후 중국은 주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과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을 당시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구소련의 팽창야욕을 견제하는 세력이 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한국주둔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이후 중국은 한국 주둔 미군이 궁극적으로는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鄧小平 사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주한 미군이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국제고립 심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등 모험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개선 이후 북한이 미, 일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될 경우 중국은 전략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鄧小平 사후 중국의 대남북한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 안정유지를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정세 안정유지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鄧小平 사후 곧바로 중국이 북한과 체결하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서방 관계개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鄧小平 사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鄧小平의 사망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중·북한간 정치·군사적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鄧小平 사후 한·중간 경제교류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내 안정유지 차원에서 중국이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안정기조의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치상황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경제관계는 이미 상호의존적 관계로 진입되었고, 중국은 鄧小平 사후에도 경제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일시적인 정치상황 변화가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한·중간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도 계속 진전될 것

으로 보인다. 물론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가 북한지지 입장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과 안보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진출정책을 견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일본과의 영향력 확대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21세기 최대 敵國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경계하고 있는 바, 일본과 유쾌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韓國의 對應方案

鄧小平 사망으로 인한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는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추진함으로써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일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가 성공적으로 확립되도록 지원하고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과 관련 중국에 대해 과도한 압력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이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감안, 대만과의 관계회복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鄧小平 사후 중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체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의 정치·외교적 움직임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대만과의 관계회복을 당분간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분야 보다는 양국 항공기 직항 재개 등 실질적 교류·접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한·미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전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과 안보협력 확대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19세기말 李朝가 범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간 동맹관계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국과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鄧小平 사후 군부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이 군사력 증강속도를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 일, 러 등 주변 강대국과 협력,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상호 불가침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쌍무간 안보협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군부

는 북한 지도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라는 점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한국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안보적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에게 북·중간 군사동맹조약 수정 및 한·중간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축적하는 동시에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吉林省과 遼寧省 등 지방정부와도 교류와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방에 이양된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상당부분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민족 문제가 鄧小平 사후 중국 정국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족의 동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계강화 노력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중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도 한반도 긴장상황 완화 차원에서 남북한간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바, 한국은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단기적으로 중·북한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중국을 이용한 대북 개방 유도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

| | |
|----------------------------|----|
| 第I章 序論 | 1 |
| 第II章 中國 國內情勢 展望 | 6 |
| 1. 政治 | 6 |
| 가. 集團指導體制 維持 | 6 |
| 나. 共產黨 지배체제 持續 | 13 |
| 다. 地方에 대한 中央의 統制力 維持 | 16 |
| 라. 少數民族問題 擡頭 | 20 |
| 2. 經濟 | 24 |
| 가. 經濟改革에 따른 問題點 浮刻 | 24 |
| 나. 安定 基調下의 經濟發展 持續 | 31 |
| 3. 軍事 | 33 |
| 가. 軍에 대한 黨의 統制 持續 | 33 |
| 나. 軍部の 影響力 增大 | 36 |
| 第III章 中國의 對外政策 展望 | 41 |
| 1. 對外政策 基調 | 41 |
| 2. 對美政策 | 47 |
| 가. 經濟 및 安保協力 強化 | 48 |
| 나. 美國의 霸權政策 牽制 | 52 |
| 3. 對日政策 | 54 |
| 가. 經濟 協力政策 追求 | 54 |
| 나. 日本의 政治·軍事 大國化 牽制 | 57 |
| 4. 對러시아정책 | 61 |

| | |
|--------------------------|----|
| 第IV章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 65 |
| 1. 對韓半島 政策決定 環境 變化 | 65 |
| 가. 內的 環境 變化 | 66 |
| 나. 外的 環境 變化 | 69 |
| 2. 對韓半島政策 基調와 方向 | 72 |
| 가. 韓半島 安定維持 | 72 |
| 나. 韓半島에 대한 影響力 增大 | 75 |
| 다. 韓國과 經濟協力 擴大 | 79 |
| 3. 對南北韓關係 變化 方向 | 81 |
| 가. 中·北關係 | 82 |
| 나. 韓·中關係 | 85 |
| 第V章 韓國의 對應方案 | 89 |
| 1. 對國際關係 次元 | 89 |
| 2. 對中關係 次元 | 93 |
| 3. 對南北韓關係 次元 | 96 |

第 I 章 序 論

1978년이후 중국이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데에는 鄧小平의 현명한 판단과 과단성 있는 결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개혁·개방정책 채택이래 중국은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율을 달성하여, 이미 12억 인구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까지는 「小康段階」에 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이와 같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내 정치·사회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말 이후 동유럽과 구 소련에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고 급기야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으나, 중국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치체제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鄧小平의 개혁·개방노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실로 鄧小平은 1978년이후 중국의 운명을 결정해 온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鄧小平은 1995년 8월로 만 91세를 넘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와 후계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3년초 이래 공식 행사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鄧小平 후계자로 결정된 江澤民이 鄧小平과 친분관계에 있는 周冠五

1) 중국이 200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小康段階」는 1인당 연평균 국민소득이 약 800달러에 달하여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64.

와 周北方을 공금유용과 기업내부 거래관련 비리 혐의로 해임·구속하고, 자신의 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전 北京市 당서기 陳希同을 숙청하는 등 사정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중국 신지도부는 「分稅制」 실시 및 「民主集中制」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당과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회복·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鄧小平은 이미 1989년말과 1990년초 자신이 최후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여 평당원으로서의 신분만을 유지하여 왔다. 나아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공식 출범됨으로써 일상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鄧小平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鄧小平은 자신의 후계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입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가능한 공식 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鄧小平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鄧小平은 북한의 혁명세대 지도부와의 교분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을 막후에서 지시하여 왔다. 개혁·개방정책 채택이후 중국의 대외경제 지원정책이 경제

적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중국의 신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江澤民과 李鵬 등 중국의 신지도부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테크노크라트형 지도자로서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무릅쓰고 북한에 경제원조나 정치적 지원 제공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鄧小平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과 북한의 혁명 원로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92년 여름 중국이 한국과의 국교수립 방침을 최종 확정할 당시에도 鄧小平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 국내정세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내외정책에도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 중국의 한반도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鄧小平 사후 중국 국내정세 변화방향을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鄧小平 사망이후 예상되는 중국 내부정세 변화 방향을 정치·경제·군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鄧小平 사후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얼마나 공

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속될 것 인지의 여부, 그리고 소수민족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鄧小平 사후 중국의 신지도부가 인플레이문제, 농촌경제 꺾임문제, 국유기업 적자문제 등 중국정국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이 정치적 통제하에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鄧小平 사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과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정치 과도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군부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전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鄧小平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전망할 것이다. 지난 16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 일,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 방향을 전망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鄧小平 사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할 것이다. 아울러 鄧小平 사후 중·북한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鄧小平 사후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을 對국제관계 차원, 對중국관계 차원 및 對남북한관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第II章 中國 國內情勢 展望

鄧小平은 현재 중국 공산당 평당원으로서의 신분만을 보유하고 있고 아무런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의 생존은 중국 정국안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1976년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毛澤東 사망이후 중국에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처럼 鄧小平 사망이후에도 중국에서 정치·경제적 혼란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전망해 보기로 한다.

1. 政治

가. 集團指導體制 維持

鄧小平은 毛澤東시대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철저히 인식하여 권력분산을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왔다. 鄧小平은 모든 정치권력이 일개인에 집중될 경우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곤란하며, 관료주의가 심화되고, 각종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지도체제 확립을 주장하여 왔다.²⁾ 이와 같은 鄧小平의 주장에 따라 중국은 1980년대 이래 집단지도체제를 모색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江澤

2)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 「鄧小平文選, 1975—1982」(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288-289.

민과 李鵬 그리고 喬石 등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江澤民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鄧小平이라는 막후 조정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가 鄧小平 사망을 계기로 변화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홍콩 주권회복과 15차 당대회 및 9기 전인대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1997년과 1998년을 전후하여 현재 중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홍콩 주권회복을 계기로 廣東省과 福建省 등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자유와 민주화 요구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부내에서 정책대립이 심각하게 노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차 당대회시 새로운 당중앙위원과 정치국위원 및 정치국상무위원을 선출할 것인 바, 이를 계기로 연로한 劉華清, 喬石, 李鵬, 楊白冰 등이 당핵심부에서 퇴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998년초 전인대에서 江澤民이 국가주석직을 李鵬이나 喬石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고, 헌법 규정에 따라 李鵬이 국무원 총리직을 사임해야만 한다. 따라서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1997년 중반기 이후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는 상당 기간동안 江澤民을 중심으로 李鵬, 喬石, 李瑞環, 朱鎔基 등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한 집

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1976년 毛澤東 사망이후 華國鋒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華國鋒이 毛澤東 사망 불과 5개월전에 후계자로 지목되어 권력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당시 중국 지도부내에서 文革派와 反文革派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毛澤東 사후 중국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華國鋒이 주장하는 「凡是論」을 반대하고 鄧小平이 역설하였던 「實事求是論」을 적극 지지·옹호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華國鋒이 국민들과 당내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중국에는 鄧小平, 陳雲, 李先念, 葉劍英 등 華國鋒 보다 혁명경력이 많은 원로지도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華國鋒이 독자적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

반면, 江澤民은 이미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鄧小平의 후계자로 공식 확정되어 현재 중국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으며, 당·정·군의 핵심 지도부내에 상당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華國鋒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와는 달리 당원로들이 江澤民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실 정치문제에 대한 당원로들의 개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다.³⁾

둘째, 江澤民은 1989년 당중앙군사위 주석에 임명된 이래 3대

3) 중국 공산당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고문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당원로들의 정치문제 개입 소지를 감소시켰다.

總部(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및 7대 軍區 주요 지휘관을 자파 인사로 교체하고 총 29명의 上將중 25명을 직접 임명하는 한편, 무장경찰부대(국내치안 담당) 사령관에 측근인 巴忠淡을 임명함으로써 군부내 세력기반을 강화하여 왔다. 또한 江澤民은 각 군부대를 시찰하여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여 왔으며, 1992년이래 당중앙군사위원이 정치군인 보다는 전문군인으로 충원되고 있는 점도 군부에 대한 江澤民의 영향력을 구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⁴⁾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江澤民의 군 장악력이 약하다는 논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군에 대한 江澤民의 지지기반 확대는 江澤民체제의 안정성을 제고시켜 주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셋째, 江澤民은 1994년 9월 14기 4중전회에서 黃菊 上海市長을 정치국원에 임명하고, 吳邦國과 姜春雲을 중앙 서기처 서기로 등용하는 등 자신의 지지세력을 당 핵심부에 포진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吳邦國과 姜春雲을 당중앙 서기처 서기로 임용함으로써 기존 5명의 서기처 서기를 7명으로 증원하여 서기처의 권한을 강화시켰는 바, 이는 鄧小平 사후에도 집단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4) 1992년 10월 14차 당대회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楊尙昆과 楊白水 등 정치군인을 축출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遲浩田, 于永波, 簿全有 등 전문 군간부로 충원하였다. 또한 중국은 1995년 9월 14기 5중전회를 통해서도 遲浩田과 張萬年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하고, 王瑞林과 王克을 당중앙군사위원으로 발탁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 군간부를 군지도부에 포진시킨 것은 정치문제에 대한 군부의 개입 소지를 감소시키고, 군부에 대한 江澤民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위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로 볼 수 있다.⁵⁾ 또한 江澤民은 1995년 3월 8기 전인대 3차회의를 통해 吳邦國과 姜春雲을 국유기업 및 농업 담당 부총리로 발탁함으로써 중국경제의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국유기업과 농촌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그 동안 지지기반이 취약하였던 국무원내에 자신의 세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다. 아울러 江澤民은 1995년 4월 그 동안 자신의 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北京市 당서기 陳希同을 부정부패를 이유로 숙청하는 등 사정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당내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⁶⁾

넷째, 중국 지도부가 鄧小平 사후의 권력투쟁은 공산당 지배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지도부 전체에 공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지도부간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鄧小平 등 중국 지도부는 이미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和平演變」 기도 등 위협요인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산당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중국 지도자들이 지칭하는 공산당 내부의 문제는 공산당 정치국위원이나 정치국상무위원

5) 중국 공산당은 1956년 9월 제8차 당대회시 중앙 서기처를 강화하여 毛澤東이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국을 견제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4년 당중앙위원회에서 취해진 서기처 강화 조치도 鄧小平 사후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 Patrick E. Tyler, "Jiang Crushes Beijing Rival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9, 1995.

7) 申相振, 「鄧小平 사후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5-01), p. 4; 박두복, 「鄧小平 이후의 중국」 외 교안보연구원-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 1995.7.4-5, p. 6.

들간의 권력투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江澤民과 李鵬 등 현 지도부도 당내 단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鄧小平 사후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정치적 과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들이 현상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계속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도 지도층 내부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현지도부는 지도부간 정치대립은 개혁·개방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공산당의 통치와 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결국 鄧小平 사후 중국은 당·정·군 최고지도자 위치에 있는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여, 국무원을 장악하고 있는 李鵬, 최근 공산당의 하부기구로서의 역할 탈피를 추구하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喬石, 경제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朱鎔基, 그리고 제4세대의 기수로서 당조직과 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胡錦濤 등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지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江澤民 등 중국의 신지도부는 毛澤東이나 鄧小平과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고 혁명과 권력투쟁 등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관료출신 정치가이다. 중국 역사상 정치·사회적 대변혁이나 대규모 전쟁이 없을 경우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유하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鄧小平 사후 단시일내에 출현하기 보다는 테크노크라트형의 지도자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江澤民은 주요 정책을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李鵬, 喬石 그리고 朱鎔基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과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며, 최고 지도자로서 江澤民의 능력과 재량권에 한계가 노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鄧小平 사후 江澤民 등 중국 지도부는 당 원로들을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병풍역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정치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의 정치 영향력 행사는 政治局 擴大會議 참여나 일선 정책결정자에 의해 입안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圈閱)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萬里, 薄一波, 楊尙昆, 宋平 등 원로들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원로들의 건강상태와 江澤民체제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당원로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1976년 毛澤東 사후 鄧小平, 李先念, 葉劍英 등이 행사했던 것 보다 훨씬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로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던 당중앙 고문위원회가 1992년에 이미 폐지됨으로써 혁명원로들의 정치개입의 명분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원로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1989년 天安門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총서기직에서 물러났던 趙紫陽이 복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

유는 李鵬과 楊白冰 등을 비롯한 현 중국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天安門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江澤民이 天安門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趙紫陽의 복권은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鄧小平 사후 정치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鄧小平 사후 단기간내에 1989년 天安門사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나. 共產黨 지배체제 持續

1992년 14차 당대회이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도입 등 개혁·개방정책 진전에 따라 중국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는 바, 이는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유지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채택 초기부터 중국은 개방과 개혁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을 대폭 수용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제개혁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의 최소한의 변화만을 허용하여 왔다. 이러한 제한적 개혁정책 결과 중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개혁과 개방에 따르는 정신적 타락, 관료들의 부정부패, 공산당의 인기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으며, 물질적 부의 축적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 공산당 당원증이 과거와 같은 신통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된 반면, 「向錢看」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등 돈벌이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학교에서도 당원에 대한 정치교육 보다는 물질적 부 축적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개혁·개방정책 심화에 따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당 간부들의 부패는 빈부격차와 물가고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과 맞물려 당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실시 이래 중국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배금주의 경향으로 당·정·군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조직과 결탁하여 밀수, 마약 등 사회범죄 행위를 일삼는 경우까지 있다. 또한 고위 간부들이 해외여행, 연회,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에 거액의 공금을 남용하여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정부패 현상은 공산당의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⁹⁾ 이와 관련, 최근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생사존망이 부패척결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상대적 낙후로 농촌지역 청년들이 입당을 기피하고 민간조직이

8) Steven Mufson, "An Identity Crisis for China Communis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7, 1995.

9) "强化治安, 深入反貪," 「文匯報」, 1995. 3. 5;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5. 3. 6.

당의 권위를 대체하는 당조직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358개 농촌 당조직중 36.5% 정도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安徽省 銅陵縣의 경우 당원이 1명도 없는 촌이 11%, 당원중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1989년 天津市 西青區내 8,044명의 공산당원중 2/3가 1958년부터 文化大革命 기간동안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지역의 45개 촌에서는 지난 1979년 이래 공산당원 숫자가 전혀 증가되지 않았다.¹⁰⁾ 또한 국유기업 이외의 향진기업과 사유기업에서는 대부분 당 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자기업에서는 공산당원의 경영진·종업원 임용을 방해 또는 회피함으로써 공산당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4년 9월 14기 4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건설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해 공산당의 조직력과 통제력을 회복·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역간 소득격차, 인플레이, 국유기업 개혁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당건설 강화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규정한 것은 당의 체질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당중앙 고위 지도자의 1/2, 지방 당서기의 1/3을 청렴도가 높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4~50대로 교체하고, 농민 당원의 도시 당조직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동당원증」을 발급한다

10) 李元浦, 陳良杰, “凝聚力從何而來?” 「瞭望」, 1994年 第42期 (1994. 10. 17), p. 9.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비리 당원의 당적 박탈 작업과(1995년 7월 北京市 당서기 陳希同도 부정부패를 이유로 당서기직에서 박탈당한 바 있음) 당원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¹⁾ 아울러 중국은 전통(유교)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과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고취시키고 있는 바,¹²⁾ 이러한 사실도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에는 공산당에 정면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집단화된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사회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공산당은 1949년 이래 중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현재도 모든 국가기구, 군대, 공안부대 및 언론매체 등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 지배체제는 경제발전예 따라 조직력에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지만 鄧小平 사후에도 상당기간 큰 무리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地方에 대한 中央의 統制力 維持

1978년이래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11) 중국 공산당은 1995년 1월 당 기관지 「人民日報」를 통해 사상통일, 전국장악, 협조강화, 사업관철 등 16자 방침을 주창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孔繁森 학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2) 張凱之, “科學地對待傳統文化,” 「求是」, 1995年 第11期 (1995. 6. 1), pp. 40-45.

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었는 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연안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지역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분리주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3천만 달러 이하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하고, 지방정부에게 가격결정, 노임, 생산계획, 상품구매 등 경제자주권을 대폭 부여해 주었다. 또한 중국은 지역차원의 경제발전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청부제를 도입함으로써 1979년까지 국가 총재정수입의 약 30%에 달하였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약 60%에 이르고 있다.¹³⁾

분권화 정책 결과 지방경제의 발전이 촉진된 측면도 있으나, 각 지역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자원을 타 지역에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廣東省 정부는 인근 湖南省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湖南省 정부의 쌀 반출 금지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가에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발생하였다.¹⁴⁾ 또한 투자결정권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됨으로써 각 지방정부들이 투자비를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중국

13) 趙建民, “塊塊與條條: 中國大陸中央與地方新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8卷 第6期 (1995. 6), p. 72.

14) 蕭何, “各領風騷的諸侯經濟,” 「大陸現場」, 1990年 第9期 (1990. 9. 1), pp. 90-91.

경제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아울러 재정 청부제 도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중앙정부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경제개혁 과정의 부산물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악화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달된 경제정책이나 명령이 지방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중국전체의 이익 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에서는 「上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 지역주의 현상은 결국 정치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주권 확대는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이나 지방정부 대표 선출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당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5년 3월에 개최되었던 8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는 당중앙에서 국무원 부총리 후보로 지명한 吳邦國과 姜春雲이 지방에서 파견된 다수의 전인대 대표들로부터 반대표를 받은 바 있다. 각 지방정부의 대표들은 자기 지역 전인대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자기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15) 吳國光, 王兆軍, 鄧小平之後的中國 (臺北: 世界書局, 1994), p. 190.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유보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인 바,¹⁶⁾ 이는 지방분권화 추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최근 廣東省-福建省-臺灣-홍콩간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과 한·일간에 형성되고 있는 「자연경제지대」(NET)도 중국을 권역별로 분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역주의 현상이 중국의 각지역 군부 세력과 결합되게 될 경우 중국의 분열상이 심각하게 노정될 가능성도 있다.¹⁷⁾

그러나 鄧小平 사망이라는 변수가 중국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주로 재정·조세·무역 등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1993년 14기 3중전회 이래 「分稅制」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에 이양되었던 재정권한을 회수하고, 1994년 14기 4중전회에서 확정된 「民主集中制」 강화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회복을 기하여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에서는 각 지역간 경제적 이기주의 현상과 함께 지역간 상호 의존성도 심화되는 추

16) 중국 공산당은 1995년 9월 14기 5중전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관계 등 12대 관계가 향후 중국의 안정과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앙과 지방간 관계 조정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改革開放中的十二大關係,” 「文匯報」, 1995. 10. 11.

17) Gerald Segal, “China Changes Shape: Regionalism and Foreign Policy,” *Adelphi Papers*, no. 287 (March 1994), pp. 34-57.

세에 있다.

한편, 중국은 1910년대 각지역에서 군벌이 할거하였던 역사가 있었고 현재도 중국 군대가 7개의 군구로 나뉘어져 있는 바,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경제주의화 경향과 지방 군부세력이 결합될 경우 중국의 단결과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군부는 군사 현대화가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¹⁸⁾

라. 少數民族問題 擡頭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정치협상회의 체도를 통해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중국 국민들로 통합하고 있다. 중국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수민족이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영토는 중국 전체 영토의 약 65%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주변국과 영토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변방지역이며, 우라늄, 석유, 철 등 중요한 전략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건국 이래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소수민족을 中華民族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 공동발전의 기치하에 소수민족의 불만 소지를 무마시켜 왔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 결과 西藏自治

18) Ellis Joffe, "The Chinese Army: Professional but Accustomed to a Central Ro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4, 1994.

區와 新疆自治區 이외의 自治區의 소수민족들은 거의 中華民族에 동화되었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新疆과 西藏 등 소수민족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自治區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西藏自治區는 소수민족 인구가 自治區 전체 인구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新疆自治區는 소수민족 인구가 自治區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自治區는 유교문화와는 전혀 상이한 라마문화와 이슬람문화를 가지고 있는 바, 특히 西藏지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北京政府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직후인 1950년 西藏이 중국에 의해서 무력으로 점령당한 이후부터 西藏에서는 北京政府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1958년부터 西藏지역의 반중국 시위가 격화되자, 중국은 무력 진압정책을 계속하였고, 1959년 西藏 지도자 달레이 라마는 인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西藏에 대한 중국의 통치에 반대해 왔다. 달레이 라마는 현재까지도 西藏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미국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西藏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西藏지역의 소수민족들도 北京政府의 통치에 대해 계속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결국 1989년 라사폭동 등과 같은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50년 10월 鄧小平이 西南軍區 정치위원으로서 西藏 무력 침공 작전을 진두 지휘하여 西藏을 중국의 주권하에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정치·경제적 혼란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鄧小平 사후 西藏과 新疆 自治區에서 분리독립 요구가 재차 폭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西藏自治區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정책도 鄧小平 사후 이들 지역의 분리독립 주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¹⁹⁾

또한 대만에서는 1995년 12월 입법의원 선거, 1996년 3월 총통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 1997년 7월에는 중국이 홍콩 주권을 회복하기로 되어 있다. 대만과 홍콩에서 전개될 이러한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향후 대만에서 분리독립 주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입법원 선거에서 대만독립을 당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民進黨이 승리하고,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 노선을 취하고 있는 李登輝 현총통이 승리하게 될 경우 대만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 분명하다.

홍콩주권의 중국 귀속은 중국과 대만관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채널 상실을 의미하며 중국에 대한 대만의 투자와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대만관계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一國兩制」 통일방안을 통하여 홍콩 주권 회수를 대만통일 문제와 결부시켜 왔는 바, 홍콩 주권 회복이후 대만에 대한 흡수통일 정책을 적극화 할 것이다. 따라서 홍콩 주권

19) 미국 의회는 西藏自治區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달레이 라마를 西藏의 국가원수로 공식 인정하고 西藏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西藏에 대한 이와 같은 미국의 개입에 대해 중국은 내부분쟁에 대한 간섭이며, 중국의 분열을 기도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美國政府欲蓋彌彰,” 「文匯報」, 1995. 6. 12.

의 중국 반환이후 대만에서 분리독립 주장이 격화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결정(1994. 9), 李登輝 총통의 방미를 허용(1995. 6. 7-12)하고 「해외이익법안」을 채택(1995. 6. 10)하여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 확대 계획을 밝히는 등 대만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의 공화당이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클린턴 미 대통령도 1996년말 실시될 선거를 의식하여 미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바, 대만의 국제무대 복귀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對대만 지원정책을 중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지원정책은 중·미관계의 악화를 야기하고 대만내 독립주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지난 7월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 인근지역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대만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경고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鄧小平 사후 소수민족문제가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은 西藏과 新疆 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이민정책과 교화정책을 실시하여 漢族으로 동화시켜 왔다. 둘째, 西藏과 新疆 自治區내 소수민족 사이에서 분파가 존재하고 있고,²⁰⁾ 과격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종족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 自治區내 대다수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국의 통치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²¹⁾ 셋째, 대만독립 주장자들은 급진적 분리독립 주장이 중국에게 대만 침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립 주장을 가능한한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2. 經濟

가. 經濟改革에 따른 問題點 浮刻

(1) 지역간 소득 격차문제

중국은 鄧小平의 「先富論」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연안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정책은 연안지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요인

20) 중국정부는 달레이 라마의 지도하에 있는 西藏 독립주의자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판첸 라마의 화신을 이용해 왔으며, 1995년 11월에는 공산당 통일전선부가 1989년 입적한 판첸 라마의 화신을 선정하기 위해 西藏 승려들을 소집한 바 있다. 즉, 중국은 西藏내 분파세력을 이용하여 독립주장을 무마시키고자 하고 있다. Matt Forney, "Divide and Rule: Beijing seeks to split Tibetan Buddhis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30, 1995.

21) 중국은 西藏과 新疆自治區를 동화시키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특히 1994년부터 중국은 西藏自治區에 대해 경제특구 지역과 같은 특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되었으나, 내륙지역 경제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였다. 또한 1984년 경제개혁의 중점을 도시부문으로 이전한 이후 농촌지역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둔화됨으로써 농촌과 도시지역간 경제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1994년의 경우에도 공업부문 생산은 17.4% 증가한 반면, 농업부문 생산은 3.5% 증가에 그쳤다. 결국 (표 1)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4년 농촌지역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1,220원 人民幣였고, 도시지역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3,180원 人民幣에 달하는 등 경제개혁 실시이후 도시와 농촌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는 중국 전체인구의 절대다수(약 80%, 1994년말 9억명)를 점유하는 농민을 소외시킴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자극하고, 농촌지역에서 시위와 소요사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1984년 도시공업 발전 우선정책 실시이후 연해도시 중점 개발정책과 농지의 공업용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경작면지가 감소되면서 1억 5천만명에 달하는 농촌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고,²²⁾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주민이 현재 약 1억명에 추산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22) 1978년 경제 개혁정책 채택 이후 1994년 말까지 중국에서는 약 천만 에이커에 달하는 경작면적이 타 용도로 전용되었다. Patric E. Tyler, "China's Worried Peasants Unimpressed by Year of the Farm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1, 1995.

(표 1) 도시·농촌 주민간 소득격차 비교

(단위: 元)

| 연 도 | 1978 | 1980 | 1985 | 1990 | 1992 | 1994 |
|-----|------|------|------|------|------|------|
| 도 시 | 316 | 439 | 685 | 1387 | 1826 | 3180 |
| 농 촌 | 134 | 191 | 398 | 686 | 784 | 1220 |

자료: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5; 陳錦華, “關於1994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199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5. 3. 21.

농촌 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유입은 농촌으로의 송금, 귀향후 농촌기업 설립 등 농촌경제 발전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으나, 도시지역 치안문제, 주택문제 및 교통문제 등을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농촌지역 공산당 조직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실례로 1993년의 경우 北京, 上海, 天津 등 중국 3대 도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의 50%, 廣東省 廣州와 深圳 등 동남부 연해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80%가 농촌 유동인구에 의한 것이었다.²³⁾ 또한 농촌지역 경제의 상대적 낙후는 결국 농업생산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이는 중국에 식량부족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²⁴⁾

2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27, 1994; 李照, “北京外來流動人口管理將有法可依,” 「瞭望」, 1995年 第16期 (1995. 4. 17), p. 13.

내륙 농촌지역의 상대적 경제낙후는 농민들의 폭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곡물 수매를 관장하는 국가기관과 국영회사들이 현금 부족을 이유로 지불약정증서(白條)를 남발하고 지방정부들도 농민에게 각종 부과금과 개발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농민 소요사태 발발을 부추기고 있다.²⁵⁾ 농민소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사회 안정에 미칠 심각성을 감안, 중국은 농가 재정부담 경감책을 발표하고 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불만을 적극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중국의 농업·농촌문제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안정과 기층 공산당 조직 유지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²⁷⁾ 따라서 중국은 1994년부터 농촌 주민의 도시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戶口制度」를 엄격히 실시하고, 특히 北京의 경우 農村戶口를 가진자가 시에 진입할 경우 1인당 10만원(인민폐)을 시정부에 납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고자 하고 있다.²⁸⁾ 아울러 중국

24) 중국은 1994년부터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와 같은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간 곡물 소비량의 1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中央日報」, 1995. 8. 5.

25) “今年決不允許打白條,” 「人民日報」, 1993. 4. 15; 楊永年, “四川仁壽打槍事件詳情,” 「文匯報」, 1993. 6. 13.

26)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4. 3. 11.

27) 중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업생산을 급속하게 높이기 어렵고, 둘째, 경작면적이 감소되고 있고, 셋째, 유통체제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다. “從兩會看中國農業,” 「文匯報」, 1993. 3. 23.

28) 李煦, “北京外來流動人口管理將有法可依,” 「瞭望」, 1995年 第16期 (1995. 4.

은 중국 인구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3월 8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姜春雲을 농촌문제 해결 전담 부총리로 발탁하였다.

한편, 도시 노동자의 약 70%를 고용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비효율 문제(국유기업 생산액이 도시 전체기업 생산액의 50%에 미달)도 중국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향후 중국경제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인구를 도시지역 기업에서 흡수해야만 하기 때문에도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사영기업을 확충해야만 한다.²⁹⁾ 따라서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문제를 최대 경제 현안으로 인식하여 1995년 3월 8기 전인대 3차회의시 吳邦國을 국유기업 개혁 전담 부총리로 발탁한 바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국유기업 종사자의 약 1/3에 달하는 잉여노동력을 감축해야 하는 바,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도시 실업자 양산이 불가피하다. 아무런 대책없는 실업자 증가는 결국 중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문제, 도시기업 개혁문제 등 근본적인 치유를 요하는 경제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들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된 상황속에서도 중국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

17), pp. 12-13.

29) Jack A. Goldstone, "The Coming Chinese Collapse," *Foreign Affairs*, no. 99 (Summer 1995), pp. 40-41.

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은 앞으로도 중국 공산당과 현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이 농촌지역 경제발전을 적극화 하고 국유기업 개혁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국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인플레이문제

급진적인 경제개혁·개방정책 결과 중국경제는 1978년 이래 연평균 9.3%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가격체제 개혁과 무분별한 중북투자 등으로 인하여 인플레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와 14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긴축정책을 마무리하고 개혁·개방의 속도를 가속화 하였던 바, 1989년 이래 안정세를 보여왔던 물가상승율이 1993년 이후 급격히 치솟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1.7%에 달하였으며, 곡물, 육류, 생필품 등 도시 소비자 물가가 3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연간 억제선을 두배내지 세배까지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 심화는 고도 성장정책에 의한 투자과열, 가격체제 개혁,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 증대, 농산물가격 상승 및 元貨 평가절하 등에 기인하고 있는 바, 중국은 중앙정부의 거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율을 낮추는 등 안정 기조하의 성장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³⁰⁾ 아울러 중국은 인플레이 억제를 1995년도

(표 2) 중국의 물가상승율 추이

(단위: %)

| 연 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상승율 | 17.8 | 2.1 | 2.9 | 5.4 | 13.0 | 21.7 | 16.6* |

* 1995년도 수치는 1~9월 기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율임.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년호; 陳錦華, “關於1994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199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5. 3. 21; 「지역경제」, 1995년 11월호, p. 7.

3대 경제정책 목표중의 하나로 설정, 물가상승율을 15% 범위내에서 규제하고자 하고 있다.

1989년 天安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중의 하나가 과도한 통화 팽창 압력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에도 인플레이문제는 상대적 경제 박탈감에 빠져있는 지식인과 도시 노동자의 불만을 분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식인과 도시 노동자들은 한정된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바, 가격체제 개혁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는 식량과 야채를 비롯한 식품 및 소비재를 구매하기가 점차 곤란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등소평 사후에도 물가 상승세

30)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5. 3. 6.

가 더욱 심화될 경우, 지식인과 도시 노동자들이 반체제 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방대한 실업을 해소와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도 성장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문제 해소가 중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나. 安定 基調下의 經濟發展 持續

경제발전이 정치·사회적 안정을 보증하는 주요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중국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개방노선에 대해 중국 지도부내에 의견 대립이 거의 없고, 중국국민 대다수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현재와 같은 경제개혁·개방정책 노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은 지역·계층간 소득 격차, 인플레이, 부패 등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급진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절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제개혁의 속도와 폭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많다.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은 무엇보다도 대내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당

원과 정부 관리의 부패에 대한 정풍 강화, 연해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와 내륙지역 개발 지원 확대 등 안정 기조의 긴축경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상되는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계획안을 협의한 1995년 9월 14기 5중전회를 통해서도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14기 5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은 향후 중앙정부의 거시조절 기능 강화와 시장화 촉진을 양대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하되 거시통제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³¹⁾ 이러한 경제발전 정책은 안정기조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 보다는 경제안정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정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원될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는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 및 비국유부문의 성장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처하여 안정정책의 강화가 오히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정치·사회 안정 자체를 위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일정기간 동안의 정치·사회적 과도기를 지나 중국은 개혁·개방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하는 등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 楠石因, “江核心內政外交雙交驗北戴河會議增添新內容,” 「廣角鏡」, 1995年 7月號 (1997. 7), pp. 6-10; “中共關於制定九五計劃和二〇一〇年遠景目標的建議,” 「文匯報」, 1995. 10. 5.

결국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개혁문제와 농촌경제 침체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2000년까지 중국경제는 대체로 연 10% 내외의 성장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축기조의 경제정책 결과 1994년 21.7%에 달하였던 인플레이션도 다소 둔화되는 등 鄧小平 사후 중국경제는 점진적 발전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軍事

가. 軍에 대한 黨의 統制 持續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유일 집권 정당인 공산당이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당과의 혁명전쟁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된 중국에서 군대는 공산당과 더불어 중국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양대 기구로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毛澤東과 鄧小平 등 중국의 지도자들은 군부의 지지없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공산당이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믿고,³²⁾ 이러한 원칙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진행되고 있는 군사개혁 조치는 군에

32) 毛澤東, “戰爭和戰略問題,” 『毛澤東選集』, 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5), p. 512.

대한 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군대를 당군으로 유지해옴으로써 군의 과도한 정치개입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인식하여 1983년 이래 당중앙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군을 종전의 당군에서 국가군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도 중국은 병역제도와 군 인사제도의 제도화를 위해 병역법과 군관복무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依法治軍」(법에 의한 군사관리)원칙을 강조하고 있다.³³⁾ 또한 중국은 조직과 인사개편을 통해서도 군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鄧小平은 1992년 14차 당대회 직전 군부내 파벌을 조장함으로써 군을 사조직화 하려 하였던 楊尙昆과 楊白水 등 정치군인을 제거하고, 젊고 유능한 직업군인을 군 요직에 등용하여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⁴⁾ 물론 군 지도부내 정치군인을 제거하고 직업군인으로 배치한 목적중의 하나는 鄧小平 사후 江澤民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도 볼 수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이러한 군사개혁과 기층 당조직 이완현상을 감안 할 때, 鄧小平 사후 군부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와 명령이 효과적으로 행해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권력승계의 정치적 과도기에 처하여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33) 「文匯報」, 1994. 10. 5.

34) "The 14th Party Congress In Session," *China News Analysis*, no. 1471 (november 1, 1992), pp. 8-11.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 또한 1980년대 군사개혁 조치로 인하여 중국 군대가 과거의 당군에서 국가군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공산당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 군부가 공산당의 통제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중국군부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군부는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어느 계층보다도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었기 때문에 공산당과 현 지도체제에 그다지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이 군사개혁을 추진해 온 주요 목적은 군을 경제개혁·개방정책의 지원세력이 되게 하고, 鄧小平 사후 공산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협력하도록 유도하려는데 있다.³⁵⁾ 따라서 중국의 군사개혁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군의 국가군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鄧小平 사후 중국 군부는 공산당의 명령과 통제하에서 정치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군의 정치개입이 공산당의 통치력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1960년대 말 文化大革命과 1989년 天安門事件 등과 같은 정치적 혼란기에도 군부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문제

35) 이와 관련, 중국은 중국군대가 「保駕護航」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여 왔다. 「人民日報」, 1993. 8. 1.

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毛澤東이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 공산당이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였던 측면이 많다.³⁶⁾

나. 軍部の 影響力 增大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 군부의 정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江澤民, 李鵬, 喬石 등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과거 毛澤東 이나 鄧小平 등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江澤民을 위시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毛澤東과 鄧小平과는 달리 혁명전쟁을 겪지 않은 실무형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지도부가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필요성은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를 불가피하게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鄧사후 중국 지도부가 대내 단결을 기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수용하도록 할 것이다.

1989년 天安門사건 이후 중국이 군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군부 지도자들을 당 지도부에 대거 등용하는 등 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은 鄧小平

36) 신상진·전현준,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0-54.

이후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전략으로 보아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1978년이래 중국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고, 4개 현대화중 국방 현대화를 가장 경시해 왔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220억元에서 221억元으로 감소되고, 같은 기간동안 국가 총재정 지출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7.48%에서 8.05%로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표 3)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이후 중국은 6.4 天安門 사건 해결과정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 협조와 걸프전 이후의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0% 이상씩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왔다. 특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鄧小平이 현실정치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감소시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중국은 군사비 증가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국방예산에는 국방연구비, 병참지원비 및 군기업 소유기업의 수입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중국이 발표하는 것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이와 같이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데에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내 정치적 고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군사 무기·장비를 현대화 하고 군인들의 급여수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군부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⁷⁾

37) 중국이 군사예산을 확대하는 주목적이 군인들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주장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장 劉仲黎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표 3)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추이

(단위: 억원)

| 연 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국 방 비 | 251.5 | 290.3 | 330.3 | 378.0 | 433.0 | 550.6 | 630.9 |
| 전년대비증가율 | 15.4 | 15.4 | 13.8 | 14.4 | 14.5 | 27.2 | 14.6 |
| 재정지출중 국방비 | 8.3 | 8.4 | 8.7 | 8.6 | 8.1 | 9.5 | 9.9 |

자료: 「國家統計年鑑」, 각년호; 劉仲黎, “關於1994年國家豫算執行情況和1995年中央及地方豫算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5. 3. 21; 胡平, “駁中國軍事威脅論,” 「文匯報」, 1995. 5. 7.

또한 중국의 현 지도체제는 군부 지도자들을 대거 당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군부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1987년 13차 당대회시 당중앙위원중 군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8.3%였으나, 1992년 14차 당대회시에는 당중앙위원중 군 인사가 점유하는 비율이 23.2%로 대폭 증가되었다.³⁸⁾ 또한 14차 당대회에서 劉華清 상장이 당 최고위직인 정치국상무위원으로 발탁되었는 바, 이는 1977년 葉劍英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된 이래 군지도자가 당 최고위직에 임명된 최초의 일이다.

당 최고 지도부내에 군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게 됨에 따라 당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발언권 확대는 당연한 추

「人民日報」, 1994. 3. 11.

38) 「人民日報」(海外版), 1992. 10. 19; 「人民日報」(海外版), 1992. 10. 20; 俞雨霖, “13大後的中共軍人政治角色:持續與變遷,” 「中共13大問題的研究」(臺北: 中華戰略學會, 1988), pp. 121-126.

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는 여전히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도부 간 토론과 합의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중국의 현 지도부는 군부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⁴⁰⁾

과거 중국 군부의 정치행태를 감안해 볼 때, 중국 군부의 정치 참여 확대는 대내정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많다.⁴¹⁾ 중국 군부는 어느 집단 보다도 중앙정부가 취약하거나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강력하고 단합된 상태로 유지되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 군부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의 의해서 군사 예산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江澤民 정권과 결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군부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는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군부는 대체적으로 민족주

39) Keith B. Richberg, "At 91, Deng Still Casts Political Shado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3, 1995.

40) 엘리스 조페는 중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 江澤民의 정치권위 미비, 제도적 요인, 민족주의 추세, 군부 자신의 이익 확보, 국제환경 요인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llis Joffe, "China's Military: Disciplined but More Influenti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 1995.

41) Michael D. Swaine, *The Military and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Leadership Institutions Beliefs* (Santa Monica, CA: Rand, 1992), pp. 156-57.

의 성향을 보이는 바, 중국 군부는 대만문제와 대미관계 등 대외 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며,⁴²⁾ 중국 지도부는 군부의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鄧小平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군부는 외교부가 대외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나약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³⁾ 이와 관련, 19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이 연장된 직후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이 李登輝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용한 후 미국과 대만에 대해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42) 앨런 화이트링 교수는 민족주의를 긍정적 민족주의(affirmative nationalism), 독단적 민족주의(assertive nationalism), 공격적 민족주의(aggressive nationalism)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민족주의가 대외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군부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Allen S. Whiting,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China Quarterly*, no. 142 (June 1995), pp. 295-316.

43) 羅米, "中共軍方攻外交部," 「爭鳴」, 1994年 7月號 (1994. 7), pp. 6-8.

第三章 中國의 對外政策 展望

毛澤東이 권력을 장악하였던 197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는 毛澤東 일개인에 의해서 주요 대내외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毛澤東의 권위가 신격화 되었기 때문에 당내 어떤 지도자도 毛澤東의 정책결정에 도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데올로기 중시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며, 毛澤東 사망이후 등장한 새로운 지도부하에서 비로소 實事求是의 대외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⁴⁴⁾

그러면 과연 중국의 최고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현재와 같은 실리적이며 현상유지 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인지를 미, 일,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조망해 보기로 한다.

1. 對外政策 基調: 주변환경의 안정유지와 대외 영향력 확대

鄧小平 사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환경과 毛澤東 사후 중국이 직면하였던 대외정책 결정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할 것이다. 毛澤東 사후 등장한 華國鋒은 毛澤東이

44) 물론 1969년 소련과의 국경분쟁 이후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후계자로 지목되어 당내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鄧小平과 李先念 등 개혁지향적 원로들에 의해서 권력을 박탈당하게 되어, 소위 「凡是論」이라고 알려진 毛澤東 노선을 오랜 기간동안 전개하지 못하였다.⁴⁵⁾ 결국 毛澤東 사후 2년뒤 중국의 대외정책에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鄧小平 사후 상당 기간동안 중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4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鄧小平의 실리주의적 정책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배경으로 볼 때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鄧小平 사후에도 대내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江澤民, 李鵬, 朱鎔基, 喬石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혁명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테크노크라트형 지도자들이며, 鄧小平에 의해 직접 발탁된 인물들이다. 또한 이들은 중국 국민들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내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5) 1976년 9월 毛澤東 사후 등장한 華國鋒이 주장한 「凡是論」은 毛澤東이 주장한 것은 모두 옳기 때문에 중국이 毛澤東의 정책노선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華國鋒이 「凡是論」을 주장한 것은 毛澤東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보완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내외 안정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게 될 것이다. 1989년 天安門 사건이후 개최된 13기 5중전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사임 이후 鄧小平은 중요한 공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鄧小平의 생존은 중국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대외문제가 중국의 안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유지하는데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西藏과 新疆의 소수민족 自治區와 접경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한반도문제와 대외 경제문제 등 주권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유연한 정책자세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에도, 鄧小平 사망이후 중국에서 毛澤東 사망 당시와 같은 대폭적인 대외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鄧小平 사후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이 지도자 일개인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7인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책변화의 폭이 클 수 있을 것이나, 7인의 정치 지도자간 합의 도출을 통해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책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이 다원적인 형태를 띠며, 지도자들이 기존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주장을 제기하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군부 등 보수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 정책자세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만문제와 南沙群島 문제 등 주권문제와 미, 일 등 강대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毛澤東이나 鄧小平과 같은 막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鄧小平의 후계자로 지명된 江澤民의 권력기반이 鄧小平 사후 정적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공격을 무리없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공고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江澤民은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용인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전투력 증강 보다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등 중국군부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 지고는 있으나, 중국군부는 여전히 부국강병을 강조하고 중국의 주권이 타국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계층으로 남아있다. 결국 江澤民체제의 취약성은 군부의 정치적 발언권 증대를 초래하게 되고,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⁴⁶⁾

46) 중국의 일상 대외정책은 外交部에 의해서 집행되나, 주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대외 타협지향적인 外交部 보다 黨中央 政治局과 公安部의 입장

또한 鄧小平 사후 江澤民은 당내 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해 주요 대외정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인 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만문제, 西藏문제, 홍콩문제 및 南沙群島 문제 등 국가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부간에 광범위 하 고도 권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의 부재는 정책결정 자들로 하여금 국가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노선을 선호하는 외에 다른 대안을 갖기 어렵게 할 것이다. 결국 鄧小平 사후의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이 민족주의적이며 애국적인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독단적이며 공격적인 정책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권력승계 과정에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강경외교 노선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⁴⁷⁾

아울러 鄧小平 사후 지도부간 권력투쟁 등 대내 불안정 국면이 조성되게 될 경우에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비타협적인 자세를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가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 기관인 당 중앙에 군부 지도자들의 비율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 47) David Batchman, "Domestic Sources and Chinese Foreign Policy,"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47-49; Robert Elegant, "Expect Pride and Indignation to Remain China's Official Li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5, 1995; Keith B. Richburg, "At 91, Deng Still Casts Political Shado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3, 1995.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 시기에 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서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록 지도부가 좌경적 성향을 보여 왔으며, 대외적으로도 반외세적 태도를 보여 왔다. 1960년대 중반 文化大革命 시기 毛澤東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劉少奇와 鄧小平을 소련 수정주의자로 매도하고, 소련에 대한 강경정책을 정적 숙청과 대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과거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록 반외세적 정책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48) 이와 같은 중국정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 지도부는 대내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반외세적 민족주의」를 고취할 가능성이 있다.⁴⁹⁾ 중국 지도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대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주권문제에 대해 비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에 대해 강경한 정책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변혁기에 중국이 대외 타협정책 보다는 대외 강경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1987년 胡耀邦과 1989년 趙紫陽의 숙청 사실을 통해서도 근거를 발견할

48) 중국외교에 있어서 반외세적 경향에 대해서는 廖光生, 「反外勢與中國政治」(香港: 明報出版社, 1987), pp. 266-67; Kuang-sheng Liao, *Antiforeignism and Modernization in China*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49) 「반외세적 민족주의」란 경제적 개념 보다는 정치·외교적 개념이다. 즉, 현재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키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중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중국은 정치·외교분야에 국한시켜 「반외세적 민족주의」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鄧小平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胡耀邦과 趙紫陽이 숙청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반체제 지식인들의 민주개혁 요구에 동정적 태도를 보이고 대외 타협노선을 추종하였던데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鄧小平 사후의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강경파에 의해 숙청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대외 강경외교 자세를 견지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⁵⁰⁾

요컨대, 鄧小平 사후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江澤民체제의 취약성과 정치적 변혁기에 대외 강경자세를 보이는 중국정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이 주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비타협적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鄧小平의 사망은 정치 일선에서 혁명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원로세력의 퇴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국외교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실리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對美政策

미국은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의 하나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고 동

50) 필자는 이미 1995년 2월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申相振,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95-01 (민족통일연구원, 1995. 2), pp. 13-14.

아시아 문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미국은 중국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위협을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은 미국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협력정책을 전개할 것이나, 대만문제 등 중국의 주권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는 강경정책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가. 經濟 및 安保協力 強化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는 대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서방국가들과 경제협력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1978년 이래 지속된 경제개혁 결과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유기업의 적자 누적, 인플레이 심화, 실업을 증대 및 지역·계층간 경제격차 확대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집단화 추세로 해외시장 확보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내부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역외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집단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적 필요성은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것이다. 1970년대말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에 약 70억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하여 중국의 4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4년 중·미간 교역액이 약 400억달러에 이르고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295억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하였다.⁵¹⁾ 중국의 대외 무역수지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하고 있는 흑자폭은 중국의 외환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가히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경제의 집단화 추세에 대처하고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조속히 가입하려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⁵²⁾ 따라서 중국은 1995년 2월 미국에 약속한 바와 같이 지적 재산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대내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장벽 해소 등의 조치를 통해 대미 무역적자폭 축소를 위해 최소한도의 성의를 보일 것이다.

51) Joyce Barnathan, "China vs. America: The Most Serious Clash in Years may Cost U.S. Business," *Business Week*, July 24, 1995, pp. 12-15.

52)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문제가 미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원칙에 대해서는 吳儀, "中國與世界多邊貿易體制," 「文匯報」(香港), 1995. 1. 1 참조.

다만, 미국이 대만의 독립주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중국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력을 가할 경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고 대미 강경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유럽과 주변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교류 감소에 따르는 불이익을 만회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鄧小平 사후 대내 정치안정 확보 차원에서 중국 지도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 할 것으로 보이는 바,⁵³⁾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다 일사불란하게 행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안보 전략적으로도 미국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통일 실현을 3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현재까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더욱이 1994년 9월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하고, 1995년 6월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는 등 대만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대만의 국제지위가 강화되고 대만에서 독립 주장이 고조되는 등 대만문제 해결이 더욱 곤란한 상황

53) 중국이 鄧小平 사후를 대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1994년 14기 4중전회와 1995년 15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당의 정책지침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趙宗鼎, “四中全會決定的特点及其主要内容,” 「瞭望」, 1994년 제41기 (1994. 10. 10), pp. 4-5; “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建設幾個重大問題的決定,” 「人民日報」, 1994. 10. 7.

을 맞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대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 대로 「一國兩制」 방안에 의해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정치·안보적 관계를 회복·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미국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 지역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지역안정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에 협력한 바 있다.⁵⁴⁾ 또한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정치·군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대처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목인이나 협력 없이 자신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도 대미 협력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54)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3, 1993 참조.

나. 美國의 霸權政策 牽制

중국은 21세기 중반까지 중진 경제국으로 도약하여 과거 19세기 중반까지 아시아에서 누려왔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1978년 이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국력을 증강하여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목표는 1989년 天安門사건 이래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 대만문제, 무기수출문제 및 무역역조 문제 등을 구실로 갖가지 압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은 중국내 인권문제와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이유로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교류를 축소한 바 있고, 대만에 대해 군사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핵실험 실시와 인권문제 및 무역역조를 이유로 北京이 2000년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1994년 중반이후 미국은 중국 견제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적극화 하고, 베트남과 조기에 국교를 정상화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 결과 아시아 지역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

55) 未羊, “中美關係的挫折和前景,” 『瞭望』, 1995年 第27期 (1995. 7. 3), p. 45.

며,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처하는데 대미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 전투기 등 첨단 군사무기를 구입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연장 직후 핵실험을 실시한 것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치·군사적 관계 발전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하에 핵확산금지조약이 무기 연장된 직후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지도력에 상처를 주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한 선린관계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봉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연합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베트남, 인도 그리고 한국 등 과거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주변국가들과 선린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⁵⁶⁾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미국의 패권정책을 견제하는데 대외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다. 미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을 계속 저지할 것이다. 특히 1997년 중국이 홍콩 주권을 회복한 후 대만

56) Michael Richardson, "A Resurgent China Sets Off Alarms Over Containmen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7, 1995; James C. Hsiung, "China's Omni-Directional Diplomacy: Realignment to Cope with Monopolar U.S. Power,"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73-586.

에서 독립주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군부의 정치 영향력 증대로 중국에서 南沙群島 등 영유권문제에 대해 강경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패권 정책에 대처하지 않고서는 아시아에서 영향력 유지·확대라는 자신의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되, 주변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책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3. 對日政策

일본은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 중국을 침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구소련 붕괴이후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협력정책을 추구할 것이나, 정치·군사적으로는 견제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가. 經濟 協力政策 追求

鄧小平 사후 중국지도부는 경제발전 없이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대일 경제교류·협력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은 대일 경제교류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1994년의 경우에도 중국과 일본간 교역규모가 479억달러에 달하여 일본은 홍콩에 이어 중국의 2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일본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아 왔으나, 1993년 이후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⁵⁷⁾ 이와 같이 중국은 대일 교역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바,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1979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차관을 도입하였으며,⁵⁸⁾ 이는 중국경제 건설에 막대한 도움이 되었다.

57) 1993년 중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약 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94년의 경우에는 약 90억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人民日報」, 1995. 1. 27; 樂生, “中共與日本關係的持續與演變,” 「共黨問題研究」, 第21卷 第4期 (1995. 4), p. 38.

58) 중국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제1차 차관으로 3천 3백억엔을 일본으로부터

현재 중국은 揚子江 유역의 三峽댐 건설과 9차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96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제4차 엔차관을 보다 많이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1994년 12월 일본은 제4차 엔차관중 1차적으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5천 8백억엔을 중국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중국은 일본에 대해 제4차 엔차관으로 1조 5천억엔을 요구해 왔다. 또한 중국은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573억엔에 이르는 무상원조를 제공받아 왔으며, 1995년에도 1994년(78억엔)에 제공된 액수 보다 많은 무상원조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⁵⁹⁾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과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간 상호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현 국제질서속에서 생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 기구에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은 중국의 경제대국화를 경계하는 미국 등 일부 서방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조기 가입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미국과 경제마찰을 겪고 있는 일본과

터 도입하였으며,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제2차 차관으로 4천 7백억엔을 도입하였고,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제3차 차관 명목으로 8천 백억엔을 도입하였다.

59)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아시아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중 무상원조 규모를 대폭 축소할 움직임임을 보이고 있다. Brian Bridges, "Here Comes a New Phase of China-Japan Rivalr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1, 1995.

유럽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진출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⁰⁾

한편, 중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현국제질서가 다원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유일 패권국 지위를 이용하여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에 대한 「和平演變」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보다 많은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전략적 협력 구축정책을 전개할 것이다.⁶¹⁾

나. 日本의 政治·軍事 大國化 牽制

구소련 붕괴 이후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걸프전 당시 일본이 상당 부분의 전쟁 부담금을 제공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역할을 행사

60) 鄭若麟, “給克林頓上一堂外交課,” 「文匯報」(香港), 1995. 7. 10.

61) Robert A. Manning, “Burdens of the Past, Dilemmas of the Future: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Emerging International Syste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7, no. 1 (Winter 1994), pp. 49-50; Xu Zhixian, “Sino-Japanese Relations Continue Enhanced,” *Beijing Review*, October 12-18, 1992, p. 20.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은 1990년대 들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적극 모색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 움직임을 결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를 용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국가주권의 침해와 수천만명의 인명 손실을 입은 바 있는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중국을 비롯한 지역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변국에 대해 자행했던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⁶²⁾ 중국은 1995년 6월 일본국회가 결의·통과시킨 「부전 결의안」도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침략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³⁾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해 유

62) 「人民日報」, 1995. 8. 11.

63) 王大軍, “日本不戰決議의灰色歸宿,” 「瞭望」, 1995年 第26期 (1995. 6. 26), pp. 55-56.

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계속 잔류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시대의 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21세기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에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⁶⁴⁾ 특히 중국은 21세기 일본이 중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일 안보동맹이 파기될 경우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 제고를 이유로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구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오히려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주일 미군의 잔류를 바라고 있는 것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64)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지역 대표성에 입각하여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표하여 중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人民日報」, 1995. 3. 14; “錢其琛在聯大發表重要講話,” 「人民日報」, 1994. 9. 29 참조.

그러나 중국은 미·일안보체제가 강화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95년 11월 28일 확정된 「신방위계획대강」에서 기존의 소극적 방어전략을 수정,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일안보체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좌우하고 중국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鄧小平 사망이라는 변수는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더욱 경계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에 따라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경제정부의 축적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의 중국지도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체 이데올로기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대내 단결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⁶⁵⁾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고취는 결국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경직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鄧小平 사후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정책을 계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⁶⁶⁾

65) 이와 같은 현상은 1995년 봄 鄧小平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 중국 내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張凱之, “科學地對待傳統文化,” 「求是」, 1995年 第11期 (1995. 6), pp. 40-45.

66) Gerald Segal, “Rising Nationalism in China Worries the Japane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8, 1995.

4. 對러시아정책: 선린관계 강화

러시아는 현재 대내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혼란을 극복할 경우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대외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내 회교도가 新疆과 西藏지역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대미·일 견제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선린관계 증진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의 대중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6월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 직후 李鵬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6. 25-27)한 것도 대미 견제를 위한 공조관계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⁶⁷⁾ 또한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역내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

67) 柏樺, “中俄關係臻新階段,” 「文匯報」(香港), 1995. 6. 28.

다.

둘째, 중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도 러시아와 선린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4,356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1991년과 1994년 국경선 협정 체결이후에도 아무르강 삼각주와 대우스리스크 등 일부 지역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는 1991년 체결된 동부국경선 협정이 러시아측에 불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협정폐기를 주장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바,⁶⁸⁾ 국경선문제가 다시 중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江澤民과 李鵬 등 고위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 지도부와 신뢰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의 군 병력의 이동과 훈련 내용을 상호 통보할 것을 규정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까지 러시아와 국경선 기점 50Km내의 병력과 장비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셋째, 중국은 新疆지역내 회교도와 西藏지역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러시아와 선린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국가내 회교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新疆과 西藏자치구내 소수민족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 내의 과격한 회교도들이 중국 新疆省의 회교도들을 자극할 경우

68) 앞의 글.

중국에서 소수민족 분리독립 요구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이미 독립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선린관계를 강화하고 있다.⁶⁹⁾

넷째, 중국은 군사현대화 차원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협력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전 이후 첨단무기 구입을 통해 군사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첨단무기 판매를 거절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경제난 완화 차원에서 대외 무기판매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 전투기 26대와 S-300 지대공 미사일 4개 포대 등을 도입하여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나, 러시아의 첨단 군사무기가 중국의 군사장비 현대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러시아 군사무기 도입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이 내부 안정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선린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

69) Yang Zhong, "Does Ideology Matter?: A Case Study of Sino-ex-Soviet Republics' Rela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7, no. 4 (December 1994), pp. 472-473; "China and Central Asia on the Silk Road," *The Economist*, April 23, 1994, p. 29.

하지 못하여 정치·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경우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강경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내 안정유지와 대미·일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선린관계 증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第IV章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鄧小平은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은 없으나 1960년대 이후 김일성 등 북한 고위 지도자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접촉하는 등 북한의 원로세대 지도자들과 긴밀한 교분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鄧小平은 정치·경제적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鄧小平의 개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책을 전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특히 중국이 제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法治社會라기 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통치역량에 의해서 지배되는 人治社會라는 점에서,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여기에서는 鄧小平 사망 이후 중국의 신지도부가 한반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보일 것이며, 남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 만큼이나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1. 對韓半島 政策決定 環境 變化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중국에 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이미 수천년 이전부터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범위로 간주하여 왔으며, 淸朝 시대

까지 「朝貢關係」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결국 1894년 일본과 정면전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중국은 대내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1950년 한국전에 개입하여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바 있으며, 1980년대까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지원정책을 지속하여 왔다.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진영론적 국제질서가 와해된 1990년대에 들어서도 중국이 북한을 우선시하는 한반도정책을 전개해 온 이유도 중국이 북한을 「華夷的 關係」로 간주해 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⁷⁰⁾

가. 內的 環境 變化

중국이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중요한 비중을 두어 온 것은 중국 지도부와 북한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鄧小平을 비롯한 혁명세대 지도부는 대일전쟁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도부와 생사고락을 같이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치·군사적 지원정책을 전개해 왔다. 특히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군부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장해 온 주요 세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1992년 14차 당대회와 1993년 8기 전인대의 지도부

70) 秋月 望, “중국 대외정책의 이중성,” 제10차 외교안보연구원-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국제회의 발표논문, 1995. 7. 4-5, pp. 4-5.

인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 중국에서 원로세대 지도부가 퇴진하고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신세대 지도부가 등장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유사성 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공유 여부가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개혁에 유리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화 추세도 중국으로 하여금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데올로기 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게 하였다.

한편, 鄧小平 사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 환경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당중앙 고문위원회 폐지와 李先念, 王震, 陳雲의 사망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이미 주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당원로들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왔으며, 彭眞과 楊尙昆 역시 일선 정치무대에서 퇴진하였다는 점에서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원로의 간섭 없이 신세대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게 할 것이다.⁷¹⁾

또한 鄧小平 사후 대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 지도부 인사개편도 중국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1) 그 동안 중국에서는 당원로들이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여하거나 당정기관에서 논의된 문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왔다. 鄧小平은 1987년 12월 13기 1중전회에서 결정된 “당정의 중대 사안은 모두 鄧小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비밀 결의에 따라 현재까지 당에서 결정된 문건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고위 지도자와 접견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羅水, “十老爲鄧後吹風,” 「爭鳴」, 1994年 12月號 (1994. 12), p. 8; 羅水, “今日中共誰主大局,” 「爭鳴」, 1995年 10月號 (1995. 10), p. 7.

중국에서는 현재 「軍官服務條例」 규정에 따라 6~70대의 군간부들이 일선에서 퇴진하고 대신 5~60대의 신세대 군 지도자들이 군의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 특히 1995년 14기 5중전회에서 중국군 최고 결정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다. 군부내 제3세대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張萬年과 遲浩田이 부주석직에 임명되었으며, 王瑞林과 王克이 중앙군사위원으로 발탁되었다. 이들은 모두 혁명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직업군인들이다. 江澤民은 앞으로도 군부내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 지도부를 보다 젊고 전문적인 인사로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 鄧小平 사후 중국 군지도부가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장악되게 될 전망이다.

물론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의 당 고위 간부들과 군지도자들의 일부는 여전히 북한을 특별한 외교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나,⁷²⁾ 鄧小平 사후 중국 신지도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지정책을 전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 경제발전을 더욱 중시할 것이므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한편,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내 안정 확보 차원에서 과거 지방에 이양되었던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72) 중국공산당 원로중 가장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楊尙昆은 1992년 한·중 수교직전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1995년 9월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된 遲浩田과 張萬年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된 王克은 팔로군 출신이거나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14기 4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 말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⁷³⁾ 중국은 지방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鄧小平 사후에 야기될 수 있는 대내 혼란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나. 外的 環境 變化

미·소 냉전의 지속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양극화 현상을 비롯한 국제환경 요인도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북한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중국은 북한을 국제혁명세력으로 간주하고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60년대 이후에 악화되기 시작한 중·소 대립도 중국으로 하여금 반소 연합구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고, 1990년대 들어 국제질서가 탈냉전 추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중국에게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주었다. 한편, 1990년의 한·소 수교와 북·일 수교 교섭 진전 등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영향력 증대 움직임도 중

73) “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建設幾個重大問題的決定,” 「人民日報」, 1994. 10. 1

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⁷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타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채로 한국과도 관계개선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鄧小平 사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환경 요인은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군부의 정치 영향력이 증대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미, 일 등 강대국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대만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 친대만 성향의 공화당 인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중·미관계가 경색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중·미간 긴장국면의 장기화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미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지속·강화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세력범위내에 붙잡아 두고자 할 필요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鄧小平 사후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진출정책을 더욱 적극화 할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중국이 상당 기간동안

74) 신상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향후 전망,” 『大學新聞』 (서울대), 1995. 10. 16.

대외문제 보다는 대내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인 바, 미국과 일본은 鄧小平 사후의 과도기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하여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진출정책을 적극화 하여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내에서 이탈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유리한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 역시 21세기 역내에서 중국과의 세력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미·일의 대북한 진출정책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도 외교공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자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1995년 11월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도 이와 같은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⁷⁵⁾

75) 江澤民의 한국방문 배경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申相振,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結果 分析,” 「統一情勢分析」, 95-08 (민족통일연구원, 1995. 11), pp. 1-7 참조.

2. 對韓半島政策 基調와 方向

최고 실권자인 鄧小平 사망이후에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내 안정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인 바,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가. 韓半島 安定維持

한반도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삼성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바,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국면이 조성될 경우, 중국이 즉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반도간의 관계를 「脣齒關係」로 간주하여 왔다. 1950년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것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안보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⁷⁶⁾ 현재까지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서 미, 일, 중, 러 4강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鄧小平 사후 한반

76) 「周恩來選集」(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2.

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야기될 경우 중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 일,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군사적 충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가 심각하게 동요되고 남북한간 세력균형이 파괴될 경우에도 북한 난민이 중국 국경을 월경할 수 있는 등 중국의 대내 안정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무엇 보다도 대내 안정유지를 우선시하게 될 것인 바, 한반도문제가 자신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지원정책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⁷⁷⁾

이와 관련, 鄧小平 사후 한반도 주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정책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전망해 보기로 한다. 첫째, 鄧小平 사후 중국은 한반도가 단기간내에 통일되기 보다는 당분간 남북한간 현상이 유지되기를 선호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외부세력의 간섭 없이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한간 국력격차를 감안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일방안은 한국에 의한 북한흡수 통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한국에 의해서 흡수·붕괴될 경우 자신의 체제에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7) 張武, “朝鮮半島局勢發展的前景,” 「國際展望」, 1993年 第1期 (1993. 1. 8), pp. 8-10.

78) 중국의 이러한 우려는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통일된 직후 구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緩衝地帶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과 영토문제, 조선족문제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문제 등으로 심각한 마찰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북삼성 지역의 일부 영토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있고, 동북삼성 거주 조선족이 중국 보다는 통일한국을 조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사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잔류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미국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 밖에 없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⁷⁹⁾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휴전체제가 당분간 존속되기

78) 謹取榮, “從朝鮮民族的未來觀察朝鮮半島的統一,” 민주당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4. 5), pp. 4-5.

79)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994년 10월 Banning Garrett와 Bonnie Glaser에 의해서 실시된 중국 학자들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38-539.

를 바라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방식에 대해 동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한간 상호 불신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기에 구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휴전협정 체결의 직접 서명 당사국으로서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개입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그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 현재의 휴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써 휴전체제가 당분간 존속되어야 한다는 정책자세를 보이고 있다.⁸⁰⁾ 鄧小平 사후 중국이 대내 안정유지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자세는 상당기간 동안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韓半島에 대한 影響力 增大

1970년대말 이래 중국이 대내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해 온 궁극적인 목적은 19세기 중반 이후 상실한 국제위상을 회복하고 국

80)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文匯報」(香港), 1994. 9. 2; 申相振, “中國,” 姜元植 등,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4-57 참조.

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대내 안정을 도모하고 종합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홍콩의 주권을 회복하고, 대만통일을 실현하고, 釣魚臺列島 및 南沙群島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 군사력 증강정책을 통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대한 제해권 장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⁸¹⁾ 지역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까지도 적극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전략 요충지라는 판단에 입각,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서방측과 북한측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립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과시하고자 한 바 있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서방측의 제재행사를 반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해 왔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해 서방측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보장받으려 하였다.⁸²⁾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외 영향력 증대를 대내 단결도모 수단인 하나

81) 중국은 기존 영토보존의 소극적 방어전략을 대양진출을 목적으로한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鄧小平, “我們的戰略方針是積極防禦,” 「鄧小平論國防和軍隊建設」(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pp. 98-99;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82)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서방측의 노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연장받는 등 북한핵문제를 대미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로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반도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 휴전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배제된채 북한과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증대시키는 반면, 한반도가 자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휴전체제 전환문제가 중국과 한국이 배제된채 해결되어서는 안되며 또 해결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확대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인 바,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주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과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을 당시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구소련의 팽창 야욕을 견제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한국주둔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이후 중국은 한국 주둔 미군이 궁극적으로는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⁸³⁾ 鄧小平 사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주한 미군이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국제고립 심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등 모험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개선 이후 북한이 미, 일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될 경우 중국은 전략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중국은 채찍과 당근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북한의 대서방정책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83) 申相振, 全東震,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02; David Shamba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on a Collisi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8, 1994.

다. 韓國과 經濟協力 擴大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의 보완관계에 있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방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이 지닌 상호 보완성은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를 단기간내에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1992년 국교 수립이후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도 중국의 5대 교역국으로 도약하였다. 1994년 약 117억달러에 이르렀던 한·중간 교역 규모가 2000년에는 5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한국은 중국에게 중요한 경제교류·협력 상대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가 경제발전 없이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대중 투자와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한국을 적절히 활용해 나갈 것이다.⁸⁴⁾ 일본은 중국의 2대 교역국이지만 최근들어 대중 투자와 기술이전에 갖가지 조건을 다

84)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 조기 수교 방침을 결정한 데에도 일본의 대중 경제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Hong Liu,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 Triangular Explan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p. 1091.

는 등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제공되는 일본 자본이 군사력 증강에 전용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정부차관과 무상원조 제공 계획을 보류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일본의 대중 경제 진출을 촉진시키려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1995년 9월 14기 5중전회에서 확정된 9차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三峽댐 건설이나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경험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셋째,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경제집단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한국과 경제협력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창설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 경제집단화로 중국은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인접국인 한국시장 확보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아·태경제협력체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관세율 인하와 수입조절세

폐지 등 일부 시장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까지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각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사무 부총장을 두고 있는 한국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태경제협력체가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경제협력체로 유지되고,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바, 한국 등 지역국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 일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1995년 11월 江澤民主석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직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3. 對南北韓關係 變化 方向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균형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대한도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할 것인 바,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과도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을 독립적인 외교대상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남북한과의 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가. 中·北關係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중·북한간 동맹관계가 균열의 양상을 보여왔다. 중국은 대북관계에서 이데올로기적 연대감이나 한국전 참전 등 역사적 유대감 보다는 국가의 실리를 중시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과거 북한에 제공해 오던 식량과 원유지원을 감축하고, 북한에 대해 경화결재를 요구하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지지입장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 역시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수정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공개리에 비난해 왔다.⁸⁵⁾ 또한 북한이 중국의 대한국 관계발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함으로써 북·중관계는 더욱 긴장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한·중 수교이후 중·북한간에는 경제교류가 증대되지 않고, 인적 교류도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즉,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黨對黨의 혈맹관계로부터 國家對國家의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로 변화되어 왔다.⁸⁶⁾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북·미간 기본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중·북한관계는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화결재 실시를 유보하는 등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있으

8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86) Banning Garrett,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39-541.

며, 胡錦濤와 張萬年 등 당과 군부내 신세대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북한 지도부와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江澤民 주석도 북한 노동당 창건 50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입장을 재천명하고 중국과 북한간 우호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일도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⁷⁾

이와 같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김정일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김일성 사후의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북한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경우 북한 난민이 중국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중국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김정일체제가 권력승계의 정치적 과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 지도부와 유대관계가 비교적 소원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서방국 중시외교를 전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미국과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한·중간 관계 진전을 견제하고, 대외고립 국면을 타

87) 「人民日報」, 1995. 11. 13.

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탈냉전시대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떼어내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 일 및 한국에 대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도라고 인식하고 있다.⁸⁸⁾

한편, 북한도 대외고립 타개와 대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서방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체제안정과 대외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⁹⁾ 물론 북한 김정일 정권은 중국과 서방에 대해 등거리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중국과 서방으로부터 모두 이익을 쟁취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유리한 협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를 회복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김정일이 중·북한간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대를 이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중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⁹⁰⁾

이와 같은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전략적 필요성과 鄧小平 사후

88) 林和立, “金正日체제 돕는 中國의 속셈,” 『世界日報』, 1994. 10. 25.

89) Hong Liu,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p. 1086.

90) 『로동신문』, 1995. 9. 30.

중국의 대외정책이 다소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鄧小平 사후 중국과 북한간 관계복원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鄧小平 사후 중국의 신지도부는 대내 안정유지를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정세 안정유지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鄧小平 사후 곧바로 중국이 북한과 체결하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서방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鄧小平 사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鄧小平의 사망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 지도부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중·북한간 정치·군사적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 韓·中關係

1992년 수교이후 한·중관계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실로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과 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한 교역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산업협력관계로 발전되었다.⁹¹⁾ 특히 1995년 11월 江澤

91) 한국과 중국은 이미 1993년 산업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94년 정상회담에서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申相振, 李惟眞,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5.

민 주석 방한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과 山東省 원자력 발전소 공동 건설에 합의 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이와 같은 경제분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안보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한국의 유엔안보리 이사국 가입과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지지·지원해 준 바 있다. 한편, 한국도 중·미관계 진전을 위해 조정역을 자임하고 대만과의 정치·외교관계 재개를 반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아울러 양국은 이미 상대국 주재 대사관내에 무관을 파견하여 군사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추세에 맞추어 한·중 양국은 고위 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⁹²⁾

한·중관계가 이와 같이 정치·안보적 차원으로까지 발전되게 된 데에는 양국의 전략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견제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92) 1995년 5월 이홍구 국무총리 방중시 중국 지도부는 한국에게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중국이 한국과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東亞日報」, 1995. 5. 17.

서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1994년 10월 북·미 기본 합의서 체결로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된 직후 李鵬 총리가 방한하고, 중·미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1995년에 들어 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江澤民 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鄧小平 사후 한·중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중간 경제교류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내 안정유지 차원에서 중국이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안정기조의 경제발전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치상황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경제관계는 이미 상호의존적 관계로 진입되었고, 중국은 鄧小平 사후에도 경제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일시적인 정치상황 변화가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한·중간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도 계속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가 북한지지 입장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과 안보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진출정책을 견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수 있는 일본과의 영향력 확대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협력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21세기 최대 적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경계하고 있는 바, 일본과 유쾌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통해서 볼 때도 한·중간 정치·안보적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강대국중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가장 덜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 다음으로 중국을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⁹³⁾ 또한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없이 통일을 성취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도 한·중 정치·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3) 「中央日報」, 1995. 8. 30.

第V章 韓國의 對應方案

상기한 바와 같이,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는 동북아에서 전개될 새로운 전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정책자세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반도와 국경을 접경하고 있고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가능성을 감안, 한국은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모색·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鄧小平 사후 한국정부의 대응책을 對국제관계 차원, 對中關係 차원 및 對남북한관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對國際關係 次元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鄧小平 사망으로 인한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는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모색·추진함으로써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일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에서 社會主義 市場經

濟體制가 성공적으로 확립되도록 지원하고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과 관련 중국에 대해 과도한 압력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4년 9월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격상 정책을 채택한 후 중국이 미국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만에 대해 군사위협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대외정책 자세가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대외 타협을 주장하는 외교부의 입지가 약화되는 반면, 대외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군부와 당원로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⁴⁾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경우 중국에서 급진적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중국이 대외 강경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으로 인하여 중·미관계가 악화된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계복원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鄧小平 사후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과도한 압력정책은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국은 북한내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나, 중국의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94) 齊辛, “強硬路線君臨中國大陸,” 「九十年代」, 1994年 5月號, pp. 40-43; 羅冰, “中國軍方攻外交部,” 「爭鳴」, 1994年 7月號, pp. 6-8.

할 것이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을 대외관계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정부가 중국의 내정문제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둘째, 중국이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감안, 대만과의 관계회복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鄧小平 사후 중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체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의 정치·외교적 움직임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1995년 6월 李登輝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 이후 주미 대사를 소환하고 지도부의 방미계획을 취소하는 등 미국에 대해 보복정책을 취한 바와 같이,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계격상 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대만과의 관계회복을 당분간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분야 보다는 양국 항공기 직항 재개 등 실질적 교류·접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게 중·북한간 군사동맹조약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최근 북한과 대만간 접촉 확대 추세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셋째,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한·미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전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과 안보협력 확대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즉, 鄧小平 사후 북·미관계 개선 속도가 가속화 되고 북·일 수교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바, 이에 대

처하기 위해 중국은 한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세기말 李朝가 범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간 동맹관계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국과 안보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경사되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북·미관계가 견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고 대미·일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한국의 안보 및 통일환경이 심각하게 영향받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대중 안보협력 정책은 중국의 군사정책 투명성 요구, 군 인사교류, 정보교환 등 초보적인 수준에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鄧小平 사후 군부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이 군사력 증강 속도를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 일, 러 등 주변 강대국과 협력,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만, 홍콩 및 南沙群島 등의 주권을 회복·확보하기 위해 대양 진출정책을 적극화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안정이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동북아지역 다자안보 협력체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중국과 북한 등 지역국의 정치적 혼란과 역내 국가간 군비경쟁에 따르는 불안 요인들을 사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對中關係 次元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정책 목표로 계속 추진할 것인 바, 대내외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 사망 이후 중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을 증가와 인플레이 악화 및 지역·계층간 빈부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문제 그리고 군부의 영향력 강화와 소수민족문제 및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념약화 추세 등으로 중국의 대내 정세안정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국내 정세변화에 대비,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상호 불가침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쌍무간 안보협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당 요직에 군부 인사를 대거 등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강화는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대외 강경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군부는 북한 지도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라는 점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한국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안보적 신뢰를 강화하

고, 중국에게 북·중간 군사동맹조약 수정 및 한·중간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에게 북·중 군사동맹조약 수정 및 한·중 기본관계조약 체결 요구시 중국이 한국에게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킬 경우, 이는 한국에게 경제적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성공은 중국 내부정세 안정에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 정치·경제적 불안정 국면이 조성될 경우, 중국이 내부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대외 팽창적인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난민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국가에 대거 유입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鄧小平 사후 중국이 정치적 안정하에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은 인플레이션 심화 등 개혁·개방정책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안지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긴축기조의 경제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기

업인의 대중 투자부문 및 투자지역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지역 선정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鄧小平 사후 혼란이 예상되는 중국내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급진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이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시키는 산업을 유치하지 않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축적하는 동시에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吉林省과 遼寧省 등 지방정부와도 교류와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鄧小平 사후 중국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방에 이양된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지도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과거 중국의 통합 메카니즘으로 작용해 왔던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중국은 지방정부와 기업에게 외자도입 권한과 대외무역 권한을 이양해 주었는 바, 지방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외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吉林省과 遼寧省 정부는 중앙정부가 북한과의 교역에 따르는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물자 제공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東北三省과 山東省 등 지방정부들과도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吉林省과 遼寧省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山東省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연경제지대」(NET)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들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정책자세를 보이도록 할 것이다. 다만, 소수민족 문제가 鄧小平 사후 중국 정국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족의 동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계강화 노력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對南北韓關係 次元

한국은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중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판문점 주재 중국 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킨 바 있으나,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미국과 북한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이 한국과 평화협정 체결방안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도 한반도 긴장상황 완화 차원에서 남북한간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바, 한국은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 사후 단기적으로 중·북한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중국을 이용한 대북 개방 유도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북한 개방유도 정책을 북한 사회주의체제 흡수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것이다. 설사 중국이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청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북한지지 성향의 군부가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鄧小平 사망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안정 유지 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鄧小平 사후 한국정부는 북한 개방유도 정책을 적극적·공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비공개적·간접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鄧小平 사후 중국이 대내 안정유지 차원에서 소수민족

자치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인 바, 중국내 조선족을 이용한 대북정책 추진도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西藏과 新疆지역 그리고 고국을 가지고 있는 몽고족과 조선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동북삼성 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동북삼성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한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이 瀋陽 총영사관 설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와 중국내 조선족을 이용한 북한 개방 유도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단행본

「周恩來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84.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鄧小平文選, 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毛澤東選集」, 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5.

鄧小平. 「鄧小平論國防和軍隊建設」.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吳國光, 王兆軍, 「鄧小平之後的中國」. 臺北: 世界書局, 1994.

廖光生. 「反外勢與中國政治」. 香港: 明報出版社, 1987.

國立政治大學 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後鄧小平時期大陸情勢及未來走向」. 臺北: 國立政治大學 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95.

申相振.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結果 分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鄧小平 사후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전현준.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의 다수.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Huang, Yasheng. *Is China Going to Break up after Deng?*

Working Paper Series no. 95-1. Harvard University Press, January 1995.

Liao, Kuang-sheng. *Antiforeignism and Modernization in China*.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0.

Swaine, Michael D. *The Military and Political Succession in China: Leadership Institutions Beliefs*. Santa Monica, CA: Rand, 1992.

2. 論 文

“強化治安，深入反貪。”「文匯報」，1995. 3. 5.

“改革開放中的十二大關係。”「文匯報」，1995. 10. 11.

“美國政府欲蓋彌彰。”「文匯報」，1995. 6. 12.

“從兩會看中國農業。”「文匯報」，1993. 3. 23.

“中共關於制定九五計劃和二〇一〇年遠景目標的建議。”「文匯報」，1995. 10. 5.

羅冰。“十老爲鄧後吹風。”「爭鳴」，1994年 12月號. 1994. 12.

——。“中共軍方攻外交部。”「爭鳴」，1994年 7月號. 1994. 7.

樂生。“中共與日本關係的持續與演變。”「共黨問題研究」，第21卷 第4期. 1995. 4.

楠石因。“江核心內政外交雙交驗北戴河會議增添新內容。”「廣角鏡」，1995年 7月號. 1997. 7.

未羊。“中美關係的挫折和前景。”「瞭望」，1995年 第27期. 1995. 7. 3.

- 柏樺。“中俄關係臻新階段。”「文匯報」，香港，1995. 6. 28.
- 蕭何。“各領風騷的諸侯經濟。”「大陸現場」，1990年 第9期. 1990. 9. 1.
- 謹取榮。“從朝鮮民族的未來觀察朝鮮半島的統一。”민주당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4. 5.
- 楊永年。“四川仁壽打槍事件詳情。”「文匯報」，1993. 6. 13.
- 吳儀。“中國與世界多邊貿易體制。”「文匯報」，香港，1995. 1. 1.
- 王大軍。“日本不戰決議的灰色歸宿。”「瞭望」，1995年 第26期. 1995. 6. 26.
- 俞雨霖。“13大後的中共軍人政治角色:持續與變遷。”「中共13大問題的
研究」，臺北: 中華戰略學會，1988.
- 李鵬。“政府工作報告，”「文匯報」，1994. 3. 24.
- 。“政府工作報告。”「文匯報」，1995. 3. 6.
- 李元浦·陳良杰。“凝聚力從何而來?”「瞭望」，1994年 第42期. 1994. 10. 17.
- 李煦。“北京外來流動人口管理將有法可依。”「瞭望」，1995年 第16期. 1995. 4. 17.
- 張凱之。“科學地對待傳統文化。”「求是」，1995年 第11期. 1995. 6.
- 張武。“朝鮮半島局勢發展的前景。”「國際展望」，1993年 第1期. 1993. 1. 8.
- 鄭若麟。“給克林頓上一堂外交課。”「文匯報」，香港，1995. 7. 10.
- 齊辛。“強硬路線君臨中國大陸。”「九十年代」，1994年 5月號.
- 趙建民。“塊塊與條條:中國大陸中央與地方新關係。”「中國大陸研究」，第38卷 第6期. 1995. 6.

- 趙宗鼎. “四中全會決定的特点及其主要内容.” 「瞭望」, 1994年 第41期. 1994. 10. 10.
- 秋月 望. “중국 대외정책의 이중성.” 제10차 외교안보연구원-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국제회의 발표논문, 1995. 7.
- 朴斗福. “鄧小平 이후의 중국.” 외교안보연구원-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 1995. 7. 4~5.
- 申相振.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향후 전망.” 「大學新聞」. 서울대, 1995. 10. 16.
- “China and Central Asia on the Silk Road.” *The Economist*, April 23, 1994.
-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 “The 14th Party Congress In Session.” *China News Analysis*, no. 1471. november 1, 1992.
- Fewsmith, Joseph. “Jockeying for Position in the Post-Deng Era.” *Current History*, vol. 94, no. 593. September 1995.
- Pye, Lucian W. “Chinese Politics in the Late Deng Era.” *China Quarterly*, no. 142. June 1995.
- Batchman, David. “Domestic Sources and Chinese Foreign Policy.” Kim, Samuel S.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Bridges, Brian. “Here Comes a New Phase of China-Japan

- Rivalr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1, 1995.
- Elegant, Robert. "Expect Pride and Indignation to Remain China's Official Li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15, 1995.
- Forney, Matt. "Divide and Rule: Beijing seeks to split Tibetan Buddhis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30, 1995.
- Garrett, Banning and Glaser, Bonnie.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 Goldstone, Jack A. "The Coming Chinese Collapse." *Foreign Affairs*, no. 99. Summer 1995.
- Hsiung, James C. "China's Omni-Directional Diplomacy: Realignment to Cope with Monopolar U.S. Power."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 Joffe, Ellis. "China's Military: Disciplined but More Influenti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 1995.
- . "The Chinese Army: Professional but Accustomed to a Central Ro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4, 1994.
- Liu, Hong.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 Triangular Explan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 Manning, Robert A. "Burdens of the Past, Dilemmas of the Future: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Emerging International Syste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7, no. 1. Winter 1994.
- Mufson, Steven. "An Identity Crisis for China Communis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7, 1995.
- Richardson, Michael. "A Resurgent China Sets Off Alarms Over Containmen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7, 1995.
- Richberg, Keith B. "At 91, Deng Still Casts Political Shado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3, 1995.
- Segal, Gerald. "China Changes Shape: Regionalism and Foreign Policy." *Adelphi Papers*, no. 287. March 1994.
- . "Rising Nationalism in China Worries the Japane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28, 1995.
- Shambaugh, David. "Introduction: Assessing Deng Xiaoping's Legacy." *China Quarterly*, no. 135. September 1993.
-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on a Collisi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8, 1994.
- Tyler, Patric E. "China's Worried Peasants Unimpressed by Year of the Farm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1, 1995.
- . "Jiang Crushes Beijing Rival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9, 1995.

Whiting, Allen S.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China Quarterly*, no. 142. June 1995.

Xu Zhixian. "Sino-Japanese Relations Continue Enhanced." *Beijing Review*, October 12-18, 1992.

Yang Zhong. "Does Ideology Matter?: A Case Study of Sino-ex-Soviet Republics' Rela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7, no. 4. December 1994.

3. 기 타

「로동신문」.

「文匯報」.

「人民日報」(海外版)

「人民日報」.

「東亞日報」.

「中央日報」.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95-03 金正日 政權의 方向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
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
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59-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統一政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政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
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
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4-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4-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 ~ 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 ~ 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 ~ 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 ~ 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한·미 WORKSHOP : US-Koreans Relation at Time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研究報告書 95-1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